

보도시점 (온라인) 2026. 8. 14.(금) 12:00
(지 면) 2026. 8. 15.(토) 조간

폭염 대응에 '지방정부 드론' 활용 본격 확대

- 드론 스피커 음성 안내 방송, 열화상 카메라 모니터링 등 현장 밀착형 대응
- 행안부, 지방정부 드론 인프라 확충 및 다목적 활용을 위한 지원 추진

행정안전부(장관 윤호중)는 극한 폭염에 적극 대응하기 위해 지방정부와 협력하여 드론을 활용한 맞춤형 재난 예방 및 현장 예찰 활동을 강화하고 있다고 밝혔다.

현재 지방정부가 보유하고 있는 드론은 총 2,584대이며, 조정인력 3,635명이 시설물 안전점검, 산불 감시, 불법행위 단속, 농경지 병해충 방제 등 다양한 분야에서 드론을 운영하고 있다.

각 지방정부는 이번 폭염 기간 농경지, 비닐하우스, 야외 작업장 등 폭염 취약지역을 중심으로 예찰 안내 방송, 열화상 카메라를 활용한 열섬 현상 분석과 대응에도 드론을 적극 투입하고 있다.

지역별 주요 활동 사례를 살펴보면 울산광역시, 세종특별자치시, 경상북도, 경상남도, 충청남도는 농경지 등 폭염 취약지역을 비롯한 해수욕장, 하천, 생활공원 등 일대에 드론을 띄워 폭염 안전 수칙과 휴식 안내 방송 등 예찰 활동을 활발히 진행하고 있다.

대구광역시는 온도·습도·풍속 등 기상정보를 통합 분석해 지역 맞춤형 폭염 정보를 제공하는 '폭염 디지털 트윈'을 구축하고, 이를 통해 폭염 심각 지역에 드론을 투입해 선제적 예찰 활동을 추진하고 있다.

또한, 전남광주통합특별시 화순군은 '폭염드론예찰단'을 운영해 폭염특보 발효 시 카메라와 확성기가 부착된 드론으로 농경지를 순찰하며 폭염 속에서 작업 중인 농민에게 실외 활동 자제를 안내하고 있다.

경기도 안양시는 온열질환자 발생 시 신속히 현장 대응이 가능하도록 드론이 촬영한 현장 영상을 안양시 재난안전상황실과 실시간으로 연계·운용 중이다.

드론은 기동성이 뛰어나고 사람이 접근하기 어려운 지역을 신속히 탐색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특히 넓은 농경지는 작물로 인해 작업 중인 농민을 육안으로 확인하기 까다로운 만큼 드론을 활용한 현장 예찰 활동이 매우 효과적이다.

이에 따라 행정안전부는 지방정부가 드론의 장점을 재난 현장에 적극 활용하여 국민의 안전과 생명을 지킬 수 있도록 지방정부에 드론 인프라 확충을 지원하고 관련 제도 개선을 추진할 계획이다.

올해는, 전력 공급이 어렵거나 CCTV가 없는 재난 사각지대의 현장 상황을 신속하게 파악하기 위해 지방정부 드론 영상 데이터를 행정안전부 중앙재난안전상황실과 연계하는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나아가 성과가 입증된 우수사례가 다른 지역으로 확산될 수 있도록 지원을 확대해 나갈 방침이다.

김노경 재난안전정보통신국장은 “기후변화로 인해 가뭄과 폭염 등 재난 양상이 과거와 달리 대형화되고 장기화됨에 따라 사각지대 없는 신속한 현장 예찰이 무엇보다 중요해졌다”라며, “앞으로도 지방정부가 기후위기 대응뿐만 아니라 다양한 재난 현장에서 드론을 활용할 수 있도록 지원과 노력을 아끼지 않겠다”라고 밝혔다.

담당 부서	안전예방정책실 재난안전데이터과	책임자	과 장	이일령 (044-205-4460)
		담당자	사무관	최용주 (044-205-4466)



참고

폭염 대응 드론 활용 사진

○ 경상북도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화순군



○ 경기도 안양시

